



3면

“속도 있는 시정 · 시민 체감 행정 실현”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음 3월 8일) 제39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의 숙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가 주도 체계 가동
공공의료 중심지 도약
제도적 기반 마련돼

전북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국립의전원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주도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의료취약지로 지적돼 온 전북이 공공의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며 약 8년간 이어진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국가가 인력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에게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전 학업 비용이 국가 재정으로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의사의 전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지역에서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방의료원을 교육 및 실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교육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정신, 중독, 법의학 등 국가 필수 분야 인력 양성에도 활용될 수 있어 공공의료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북이 겪어온 입법 좌절의 역사를 딛고 이뤄낸 큰 성과다.

전북은 2018년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의대 정원 40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20대와 21대 국



군산 한 건물서 화재 발생

23일 오후 4시 43분경 군산시 지곡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가 이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화재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군산=김만호 기자

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폐기되며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전환점을 맞았고 정부가 설립 예산을 확정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이 병합 심사되며 이번 법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제나 기존 의과대학과는 별도로 전국 단위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된다.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가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 통과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부지는 전체 면적의 55.1%가 확보된 상태로, 향후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 및 인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 인제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전북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원의료원에는 교수급 의료진이 배치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함께 전북이 공공의료 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취약지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필수 정책 과제라며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 역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이제는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인력의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선발·양성·배치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 국립의전원은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공적 영역에서 사명을 키워,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책임, 전폭 지원, 집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공공의료 분야의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유입해야 한다. 전북이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떠받치는 중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만호 기자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부지는 전체 면적의 55.1%가 확보된 상태로, 향후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 및 인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 인제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전북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원의료원에는 교수급 의료진이 배치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함께 전북이 공공의료 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취약지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필수 정책 과제라며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 역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이제는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인력의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선발·양성·배치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 국립의전원은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공적 영역에서 사명을 키워,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책임, 전폭 지원, 집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공공의료 분야의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유입해야 한다. 전북이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떠받치는 중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만호 기자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부지는 전체 면적의 55.1%가 확보된 상태로, 향후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 및 인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 인제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전북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원의료원에는 교수급 의료진이 배치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함께 전북이 공공의료 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시행

도, 10억7600만원 추가 확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확대
기본형 환급률 30%p 상향·정액형 환급 기준금 50% 인하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시세 장기화로 가중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모두의 카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14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쿠키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해 시행된다. 환급지원 확대를 위해 쿠키 10억7,600만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총 사업비는 쿠키·지방비 각 24억7,400만원씩 약 49억4,800만원 규모다.

환급 방식은 △기본형(정액형)과 △모두의 카드(정액형) 두 가지로 나뉘며,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이 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급 지

원이 확대된다.

기본형은 교통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시차 시간대(오전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를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환급률을 30%p 상향한다.

모두의 카드(정액형)은 월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환급 기준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지역별 우대 혜택과 관련, 내년 지역일수록 더 낮은 기준 금액이 설정돼 혜택이 크다. /0만호 기자

미래 산업·SOC 추진 총력

김관영 도지사, 고창·부안 주요 사업 현장 잇달아 방문
드론·스마트 물류·교통·수소 등 전략사업 전방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23일 고창군과 부안군 일원의 주요 미래 산업 및 핵심 SOC 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관련사진 2면)

이번 현장행정은 △고창 호남권 드론융합지원센터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단지 공사 현장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 현장 △부안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등 도내 핵심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먼저 고창군 호남권 드론융합지원센터 공사 현장을 찾아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호남권 드론융합지원센터는 국비 232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63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호남권 유일의 드론 비행사업, 교육, 자격 기능을 갖춘 통합 인프라로, 향후 AI 기반 드론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는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단지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삼성전자는 18만1,625㎡(약 5.5만 평) 부지에 3,5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 허브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AI·디지털 트윈·물류로봇·자율주행·자동 보관 및 반출 시스템(AS/RS)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친환경 물류시설로, 소형 상품부터 대형 상품까지 모든 물류 과정을 로봇과 시로 완전 자동화하는 시계가 될 전망이다.

이후 김 지사는 고창군과 부안군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주문했다. 총연장 8.9km 규모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완공 시 이동시간이 기존 70분에서 약 10분으로 단축돼 두 지역의 생활권 통합과 물류 이동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도지사는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현장을 방문해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시설은 오는 7월 1일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세만급 수전해 투자와 연계해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0만호 기자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